

금융발전심의회 발표

포스트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과제

2020. 6. 11.

한국금융연구원

1. 코로나19 위기 대응 금융지원 정책

소상공인 및 중소·중견기업지원
(총61.6조원)

금융시장안정
(총73.5조원)

기간산업안정
(40조원)

1차
29.2조원

- 중기·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(1단계, 20.5조원)
 -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12조원
 - 중기·소상공인 특례보증 5.5조
 -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3조원
-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(2조원)
 - 원금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
 -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 2조원

- 피해 대응 P-CBO 발행 지원 6.7조원

2차
70.9조원

- 기업 자금지원 확대(+29.1조원)
 - 중소·중견기업 대출 확대 21.2조원
 - 중소·중견기업 보증공급 확대 7.9조원

-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
-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발행 지원 4.1조원
- 증권사 유동성 지원과 CP 차환 7조원
- 증권시장안정펀드 10.7조원

3차
75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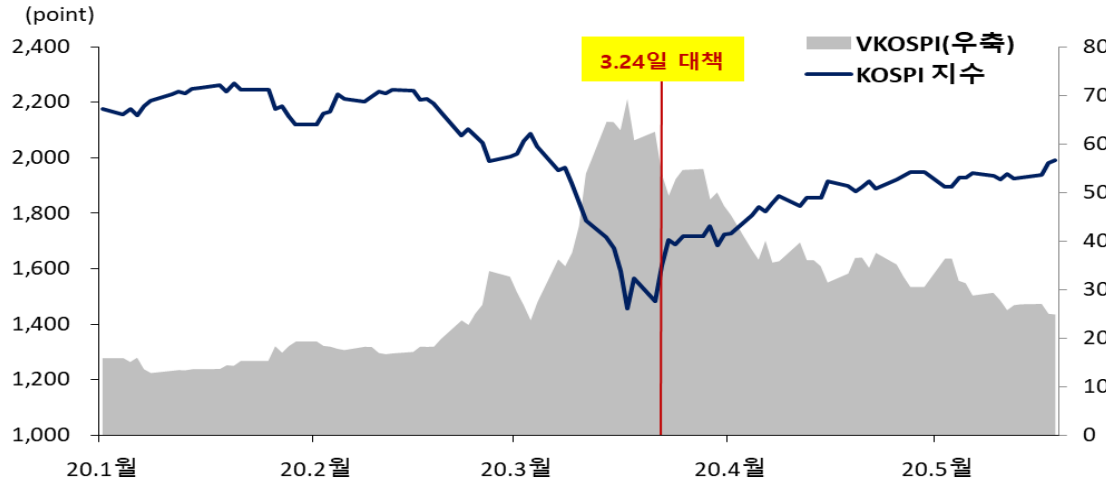
- 소상공인 지원 확대(+10조원)
 - 1단계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추가 4.4조원 (총 16.4조원)
 - 소상공인지원 2단계 프로그램 추진

- 피해 대응 P-CBO 발행 지원 확대 5조원
- 회사채(저신용등급 포함)·CP 매입 20조원

- 기간산업안정기금설치(40조원 + α)
 - 산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
 - 민자유치 + α
 -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대출,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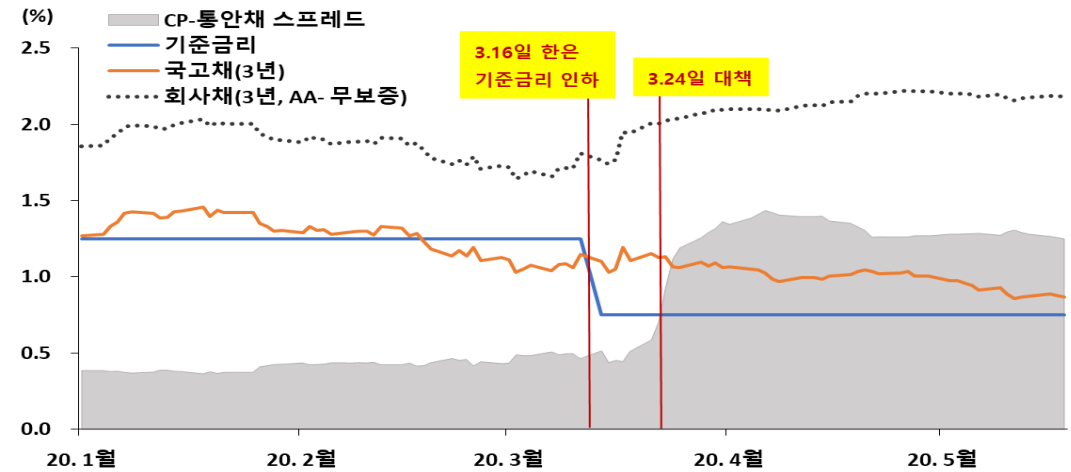
2. 금융과 실물의 불안 확산 방지: 일련의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

주식시장 불안심리 완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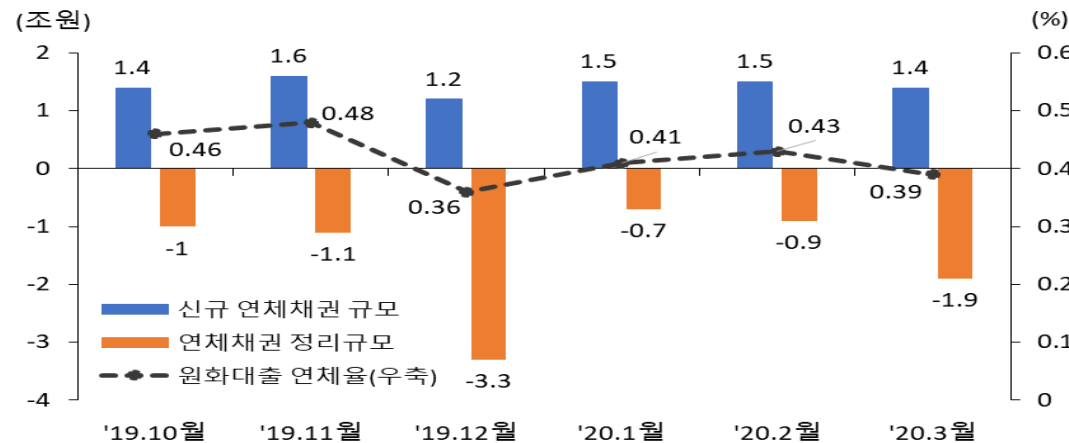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단기자금시장 및 채권시장 불안감 완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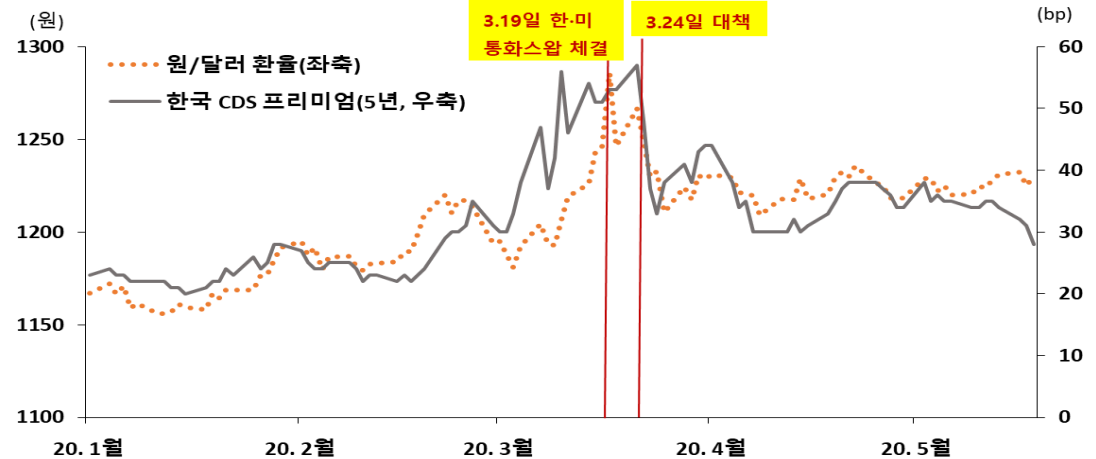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유지



자료 : 금융감독원, 보도자료 "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" 각월호.

외환시장 불안감 축소



자료 : 국제금융센터, 한국은행

3. 포스트코로나: 코로나가 촉발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

글로벌
가치사슬
단절 경험

- 세계화 추세의 정체·반전 가능성 부각
- 생산기반 다각화로 글로벌 산업지도 재편 가능성
- 글로벌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 지속
-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의 시급성 부각

언택트
경험

- 불가항력적 언택트 경험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저항이 빠르게 하락
- 디지털 채널 중요도 급등으로 디지털 기술 및 설비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
- 혁신의 확대 및 가속화

새로운
리스크
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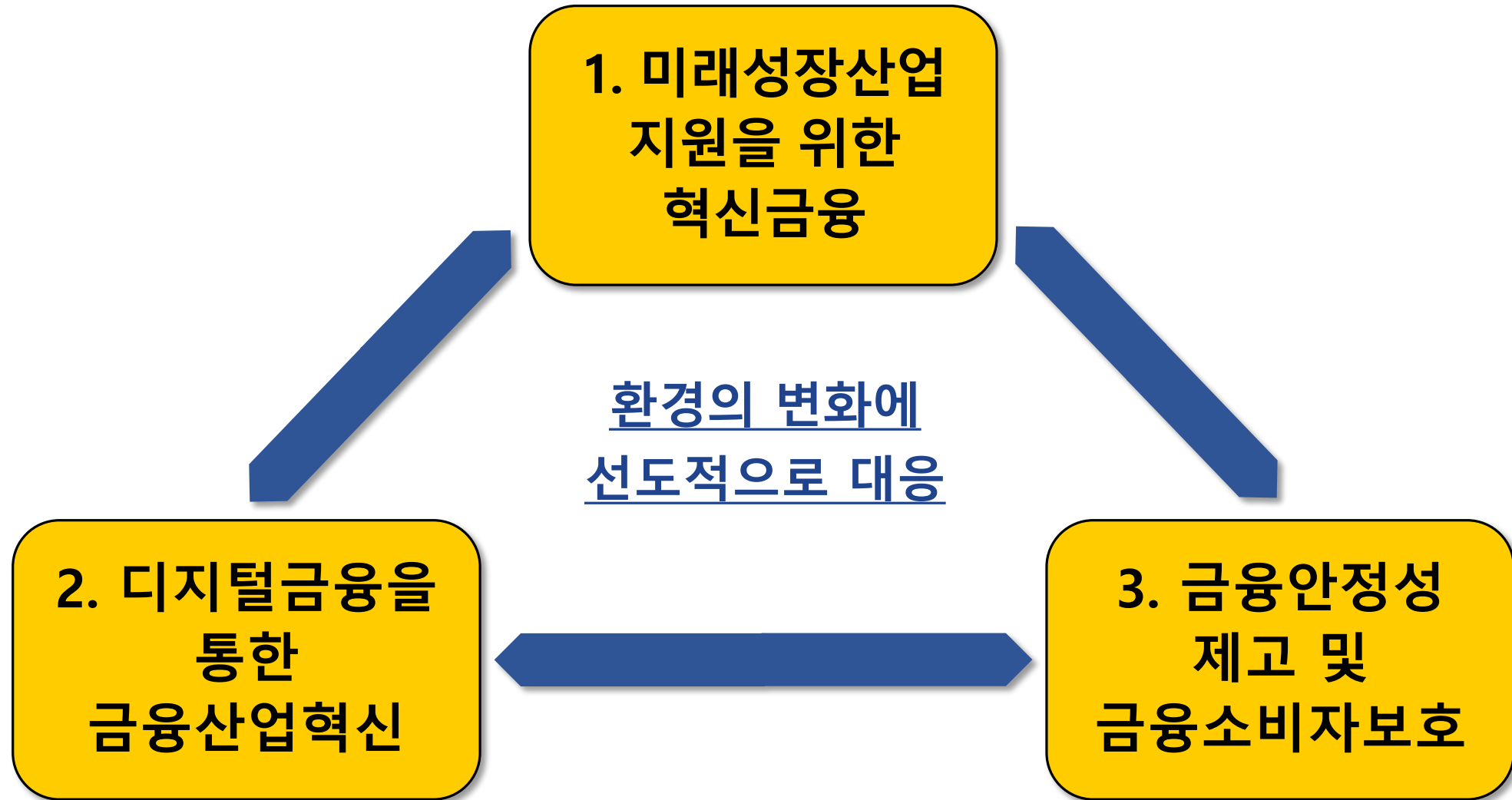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 위기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 확인
-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강화
-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요인의 예측과 선제적 대응 필요성 대두

금융의 역할 변화:
*혁신을 선도·
지원하는 금융*

금융산업의 변화:
금융의 디지털 전환

취약요인의 관리:
*금융시스템 안정과
금융취약계층 보호*

4. 포스트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방향



4-1. 혁신금융: 바람직한 진화 방향

As-Is

◆ 기존 혁신경제 정책, 벤처기업 정책 등은 정책 주도로 이루어짐

- 정책효과의 지속성 미흡,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
- 자금공급에 초점 → 멘토링 서비스 및 인큐베이팅 소홀, 낮은 투자수익률

◆ 정보생산의 비효율성 내재, 금융회사의 상업적 투자유인 부족 등

- (정보)
 - 혁신기업 관련 정보의 일관된 접근이 어려움
 - 중요한 정보임에도 공유되거나 집합되지 않음
- (금융회사)
 - 혁신기술에 대한 자체평가 능력 부족
- (기업가)
 - 지분조달보다 부채조달 선호
 - 연속적 혁신활동 미흡
 - 해외진출 어려움

- 결제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
- 4차산업혁명 활용
-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생태계

To-Be

1. 정보의 활용

2. 금융회사의
상업적 역량 제고

3. 기업가의 혁신
의지 고취

4. 정책금융의 적
극적 역할 분담

4-1. 혁신금융: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

1. 정보의 활용

- 평가의 사각지대 해소
- 공적정보(신보, 기보, 모태펀드 등)의 집합분석
(해외 사례: 일본 CRD 등)
- 기업 다중분석 DB구축

2. 금융회사의 상업적 역량 제고

- 증권사 혁신역량 제고
(예: 엑셀러레이터, 벤처대출 등)
- 자산유동화 범위 확대
- 기술·신용 평가모형의 상업화
(예, 동산금융 정착)

혁신 국가대표 모형 발굴

미래성장동력
(바이오, 의료, 디지털 등)



전방위적인
풀뿌리 혁신

3. 혁신의지 고취

-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
- 인내자본(Patient Capital)의 육성
(해외 사례: 보유기간에 비례한 의결권 가중)
- IPO활성화
(해외 사례: 혁신IPO에 대한 별도의 시장,
LTSE 참조)

4.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 분담

- 중점 지원대상 선별
- 시장실패 영역 보완
(예: 공동보증, 혁신형 팩토링 모형 개발)
- 성장지원펀드 마련

4-2.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

Before Corona

- 핀테크 산업 활성화
- 인터넷전문은행 도입
-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
-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
-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도입
- 오픈뱅킹 도입
- 클라우드/P2P 제도화 등



- ✓ 언택트(Untact) 확산
- ✓ 플랫폼의 위상 확대
- ✓ 금융회사의 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
- ✓ 빅테크 금융업 진출
- ✓ 신용위험 상승

이후 정책 방향

- 디지털 금융산업의 도약 지원
- 데이터 기반 금융의 활성화
- 공정한 규제환경 조성

4-2. 디지털금융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

주요 정책과제

디지털 금융산업 도약 지원

- 실명확인 절차의 다양성·실효성 제고
- 오픈뱅킹의 고도화 및 확장성 제고
- 금융분야 신기술(AI, 블록체인, 클라우드 등) 적용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
- 디지털 소외계층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

데이터 기반 금융의 활성화

-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
- 마이데이터 등 신규 플레이어들의 시장 안착 지원
- 데이터 및 신기술 활용을 통한 금융중개기능 촉진

공정한 규제환경 조성

-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정에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간 정합성 제고
→ '동일서비스-동일규제' 원칙 실현을 통해 혁신의 **지속가능성** 제고

4-3.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보호 강화

리스크 요인 점검과 대응

- 위기전개 과정에서 단기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의 유동성 리스크 부각
- 대형 IB도 시스템 리스크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 대두
- 금융투자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관점의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
- CP/ABCP나 여전채 등 비은행권의 단기자금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
-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, 데이터 독과점 등 리스크를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

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

- 보험사의 해외채권투자 환헤지 물량 → 선물환 매도수요 급증 + 외국인 단기차익거래 증가 ⇒ 외화유동성 위험요인
-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선물환/CRS 만기가 분산되도록 유도

단기상품시장 건전화

- (MMT/MMF) 신용/유동성 위험이 상존하는 부동산 ABCP, 기업 CP 등을 편입하며 당일/익일 인출 허용
- 초저금리 여건 하에서 단기상품시장 위험 확대 가능성 → 단기상품은 국채/우량채RP 위주 vehicle로 유도

4-3.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보호 강화

금융소비자보호 강화

- 저금리 기조 하에서 고수익·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
- 호황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의 확보가 가능하지만 경기침체 및 위기시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구조
→ 중위험·중수익 상품 등의 용어는 소비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어 가급적 사용을 자제
- (판매/자문규제 정비) commission에 의존하는 판매채널의 단기상품 판매관행 개선하고 지속적인 자문서비스 성숙 유도
-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자문서비스 제공

금융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

- 디지털 채널의 확대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디지털 문맹 문제가 전면에 대두
-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 수준의 오프라인 채널 확보, 디지털 이용 교육 강화

디지털 리스크 요인 식별과 대응

-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새로운 리스크 요인들이 대두
- 간편결제, 인증, 인공지능, 클라우드 시스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필요한 감독조치를 시행
- 금융회사와 핀테크, 빅테크 회사들에게도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을 유도

감사합니다.